

03

선거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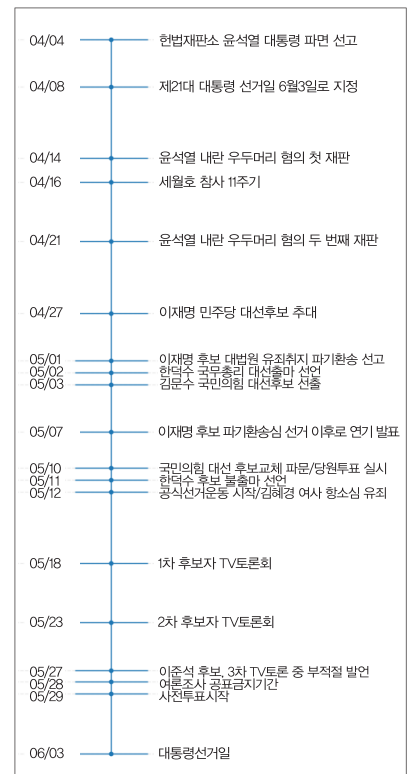
정낙원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선거보도의 중요성과 제21대 대선의 특수성

언론의 선거보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선거는 그간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주요 현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심도 있는 논의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 선거는 정치인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므로 생산적 공론장이 형성되기에 최적의 조건이 마련된다. 이러한 조건 아래 언론은 무엇을 공적 논의의 대상으로 다룰지를 결정함으로써 사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담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선거보도는 프레이밍(framing)(Druckman, 2004a; Lecheler & De Vreese, 2018)과 프라이밍(priming)(Druckman, 2004b; Iyengar & Simon, 2000)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 기준과 평가 가중치를 재배열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슈, 속성, 해석의 틀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배제하는 편집과 서술 방식에 따라 유권자의 인지적 초점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고, 이는 표심 형성 과정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선거 기간의 언론보도는 공익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준사법적 심의 체계의 감독과 평가 대상이 되며, 언론은 공적 책무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과 해석의 책임을 한층 엄정하게 요구받는다.

본 글은 이러한 선거보도의 중요성을 전제로,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전개된 언론보도가 공적 책무에 충실하였는지 여부와 그 규범적 적정성을 평가하고, 나아가 향후 선거보도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실행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이번 선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수한 조



〈그림 1〉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의 타임라인

건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상 약 1년 전부터 예비후보 준비와 정당 경선이 진행되는 일반적 절차와 달리,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모든 선거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둘째, 이번 선거는 비상계엄-국회의 대통령 탄핵-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라는 전례 없는 헌정적 사건의 연쇄 이후 실시되었다. 셋째,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선거 과정 전반을 지배하였다. 넷째, 국내적으로는 전직 대통령과 행정부 및 군 수뇌부의 계엄 공모 혐의, 전 영부인 관련 각종 의혹, 야권 유력 후보의 재판과 대법원 판결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된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중국과의 산업 패권 경쟁, 북한과의 지속적 긴장 국면이 겹친 복합적 위기의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구조적 영향력이 선거 담론 형성에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본 글은 단순히 선거보도의 양적·형식적 측면을 넘어, 언론이 공론장의 질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세 가지 기능

바람직한 선거보도가 무엇인지 논할 때 통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핵심 준거로 거론되지만(최승민·이호규, 2023), 이는 선거보도가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할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 그 자체가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본질을 규정하지는 못한다. 무엇이 바람직한 선거보도인지를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려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언론보도가 선거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먼저 규정하고, 개별 보도가 이러한 기능에 얼마나 부합하고 충실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식을 갖춘 보도라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한 정보 나열에 머문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보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바람직한 선거보도는 유권자가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권자들은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보는 먼저 언론에 의해 ① 특정 이슈가 발굴되거나 취사선택되고, ② 이슈가 공유 가능한 정보의 형태로 가공·표현되며, ③ 특정한

의미와 해석이 부여되는 세 단계를 거쳐 유권자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토대로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세 가지 규범적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익적 이슈를 발굴·선별하여 선거의제를 설정할 것. 둘째, 이슈를 정보의 형태로 가공할 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것. 셋째, 올바른 의미와 해석을 제시할 것. 이 세 원칙의 상호 보완적이고 연쇄적인 과정을 통해 선거보도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첫 번째 원칙: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공익적인
의제를 발굴/선별
해야 한다.**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출발점은 사회적 중대성과 공익적 가치를 지닌 의제를 발굴·선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다채널·다매체 환경에서도 선거정보는 여전히 언론을 통해 매개되며, 언론의 주목에서 배제된 이슈는 공론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 유권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심지어 유력 정치인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정보의 확산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선거 기간 언론에 의해 반복적으로 보도된 이슈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는 선거의제가 되고, 이는 사회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 ‘선거보도는 철저하게 사회적 중대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선택된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이 도출된다.

선거 상황에서 언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이자 지도자를 선출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사회 전반에 누적되어 온 다양한 현안들을 공론화하고 국민적 논의와 검증을 거쳐 문제해결을 이끌어내며 국가적 혁신과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제도적 계기가 된다. 선거 시기에 언론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들을 숙의의 장으로 올려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닌다. 이를 위해 언론은 후보자들의 의미 있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이를 생산적인 선거의제로 공론화시켜야 한다.

아쉽게도 이번 대선보도는 전반적으로 정책과 공약보도 비중이 과거 대비 더욱 축소되었다. 드물게 발견된 해당 보도들도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피상적으로 소개하거나, 선거유세에서 언급한 발언이나 보도 자료를 단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사회적 함의와 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검증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부 진보언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명태균 게이트 및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논문표절/양평 고속도로 변경/주가조작에 대한 의혹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상당 부분 집중하였는데, 이는 계엄의 불법성과 내란 행위를 심판하여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었으나 선거 기간 국가 발전 방향과 관련해 숙고할 만한 정책적 의제를 제시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일부 보수언론은 계엄동조 및 극우세력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선거 국면에서 공익적 가치나 사회적 파급력이 크지 않은 사안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 및 특활비 결제 의혹,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투자자 짐 로저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 등 본질적으로 정책적·사회적 함의가 낮은 주변적이고 정쟁적인 이슈를 부각시킨 측면이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 정치권력 분산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 같은 정치개혁 이슈가 선거의제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 불과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이 권력남용으로 파면되면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하게 제기되었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 행정부는 물론 사법·외교·안보·언론 등 핵심 권력기관의 수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짐으로써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대통령령과 법률 거부권을 통해 입법 권력을 행사하

며, 여당 의원들과의 정치적 연계를 매개로 국회 의사결정 및 공천 과정에 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악용된 대통령의 극단적 행정조치는 이러한 권력 집중 구조가 가진 제도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극명히 보여주었다. 아울러 소선거구제하에서 나타나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의 불비례성은 ‘표의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 의사를 의석 비율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양한 정당의 정치 진입을 촉진해 다당제 기반을 마련하여 양극화된 정국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제21대 대선은 비상계엄-탄핵-파면이 연쇄된 정치적 전환과 충격이 있던 시점으로, 정치개혁을 사회적 의제로 전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단기적 현안과 정쟁성 이슈에 논의가 매몰되면서 제도 개혁 의제가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것은 뼈아픈 한계로 평가된다.

두 번째 원칙: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선거보도의 두 번째 원칙은 ‘언론이 이슈를 정보의 형태로 가공할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성과 정확성의 원칙은 단순히 오류 없는 정보 전달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도 대상이 되는 사안이 지닌 다양한 속성과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전체 맥락 속에서 사안을 온전하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포함한다. 하나의 사안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기 마련인데, 특정 속성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배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실의 일부만을 드러낸 왜곡된 보도에 해당한다. 특히 선거 시기에는 언론이 특정 후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안의 한 단면만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러한 보도는 유권자가 사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정한 정치적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선거보도는 사안에 내재된 복수의 관점을 고르게 다루고, 배경과 맥락을 충분히 제공하는 사실적 보도여야 한다.

사실적이고 정확한 보도는 왜곡을 피하는 소극적 태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도의 사실성은 사실, 주장, 근거를 명확히 분리하고 그 진위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적극적 검증 행위를 통해 담보된다. 특히 근거 없는 선동적 주장이나 음모론적 담론을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중립이라는 명

목하에 사실과 동등한 위상을 부여하는 거짓 균형은 언론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그러한 보도는 사실의 무게와 신뢰도를 왜곡하여 공적 담론장을 훼손하고 시민의 합리적 숙고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언론의 사실 보도는 사실 확인과 검증의 체계를 내재화하여 근거 있는 정보와 검증된 주장만을 공적 영역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계엄 사태의 후유증이 채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전례 없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며 극단적인 대립 구도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력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시민폭동’이나 ‘북한 개입’으로 왜곡하는 허위 담론을 유포함으로써 역사적 사실과 민주적 헌정 질서를 훼손하였다. 나아가 일부 후보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옹호적이거나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제의 확산을 용인함으로써, 선거의 자유·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라는 공론장의 기본 규범을 약화시켰다.

일부 언론은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이러한 무근거 허위주장에 대해 명확히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사실관계를 엄정히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에 소홀했다. 이번 선거기간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 세력은 제도적 절차보다 자력구제와 폭력적 동원에 더 큰 효용을 느끼게 되었다. 공공영역에서는 혐오와 배제가 정당화되면서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동시에 정책 이슈는 증거 검증 절차에서 이탈해 정서적 선동과 표적 낙인에 매몰되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으로 진실이 호도되는 정치 환경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언론의 규범적 책무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원칙: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해설을 제공해야 한다.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세 번째 원칙은 ‘언론이 사안을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해 유권자의 숙고를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는 전후 사정, 제도적 배경, 역사적 흐름을 포함한 맥락을 충실히 복원하고, 원인과 결과,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여 사안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입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실적 해결 경로를 탐색하여 정책 대안을 비교하고, 실행 가능성, 기대 효과와 비용, 부작용과 위험을 증거에 근거해 분

석함으로써 해결지향적 저널리즘을 구현해야 한다.

올바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책무를 포함한다. 우리 사회에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마땅히 함께 추구해야 할 미덕과 공동선이 있다. 예컨대,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권의 존중, 민주주의 가치,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배제하는 평화 수호, 법치와 절차적 정당성, 사회적 포용과 차별 금지, 증거와 과학에 기초한 의사결정 등이 그것이다. 언론이 사안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는 이러한 규범적 나침반을 분명히 세워 발언과 행위가 위 원칙들과 얼마나 합치하는지, 어떤 권리와 공익을 침해하거나 증진하는지, 장·단기적으로 어떤 사회적 결과를 낳을지를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폭력과 제도 파괴를 선동하는 담론, 선거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시민의 속고를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서 언론은 ‘옳고 그름’의 경계를 분명히 밝혀 비판적으로 조명해야 하며, 반대로 증거에 기초한 해결책 제시와 권리 확대,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지향하는 시도는 공익적 가치와의 접점을 설명하며 그 함의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어야 한다. 이때 형식적 중립이나 거짓 균형에 머물지 않고, 사실의 무게와 규범적 함의에 비례하여 평가의 강도를 조절하되, 사실·해석·가치판단을 구분해 제시하고, 사용한 자료와 불확실성의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석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불법 계엄과 법원 폭동을 정당화하거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및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조롱·비하하는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공론장의 윤리, 공동체의 기초 규범을 파괴하는 행태가 공공연하게 등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공동체 파괴적 행태에 대해 일부 언론은 침묵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중계하는 행태로 반응했다. 언론은 전술한 행태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사회질서와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심각성을 해설하고 이를 냉철하게 비판해야 했다. 궁극적으로 언론의 책무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있으며, 이는 파괴적 정보와 폭력적 담론을 “동등한 의견”으로 취급하지 않고 공익의 기준에서 단호히 선을 긋는 데서 시작된다.

논쟁의 영역과 규제의 영역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 선거보도는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게 된다. 특정 이슈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다른 의제를 과도하게 부각하게 되면 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안의 실체를 시민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보도의 객관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정당과 후보자의 이슈 소유권이 어느 쪽에 있는가에 따라 불공정한 보도가 된다. 또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사실 검증 과정에 소홀한 보도는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가 되며, 사안에 내재된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속성을 강조하는 왜곡된 보도는 공정성을 해친다. 마지막으로, 사안이 지닌 사회적 함의와 본질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고, 그 잘못된 해석이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으로 작동할 경우 공정성의 원칙도 심각하게 손상된다. 이처럼 선거보도의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한 저널리즘 규범이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에 면밀히 연결되어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저널리즘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동시에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불가지적(不可知的) 개념이다. 이들은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 불편부당성 등 여러 세부요인들로 구성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개념이므로 의미를 규정하려면 많은 수식과 설명이 필요하다(문종대 외, 2007; 이완수·박재영, 2013). 또한 평가 주체의 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사회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끊임없이 변주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미를 합의하여 도출하기 어려운 상대성을 지닌다. 따라서 어떤 보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거나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는 일은 매우 신중함을 요하는 일이다. 이 개념들은 고정된 규범이라기보다 지속적인 해석과 논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실천적 지향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과 공정성은 언론 보도를 평가하거나 비평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이를 제도적 규제의 준거로 삼기에는 본질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개념을 성급하고 획일적으로 정의하여 규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불투명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설정한 채, 일부 소수 집단이 직관이나 감정,



특정 신념에 근거해 자의적으로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현재와 같이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탈진실(脫眞實; Post-truth)의 시대(McIntyre, 2018)에서 이와 같은 불명료성을 악용하여 권력이나 특정 진영이 ‘길들이기’식 규제를 시도한다면 사회적 균열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심화될 수 있다.

선거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상당부분 자유로운 논쟁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대신 공동체의 가치를 수호하고 증진시키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냉철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은 단순히 사적 표현 행위의 집합이 아니라 공론장을 형성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회 제도로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아 왔으며, 바로 그 때문에 법과 제도가 언론에 특별한 지위와 자유를 보장해 온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단순한 개인적 표현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제도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 역시 일정한 공익적 기능과 역할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언론의 본질적 책무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탱하기 위한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 반민주적, 반헌법적 계엄을 정당화하는 태도나 법원 폭동과 같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 독립운동에 대한 폄훼, 위안부 문제를 논쟁적 사안으로 보는 시각,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 등과 같이 숭고한 희생을 폄훼하거나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5·18 폭동설·북한

개입설과 같은 허위와 오류에 기반한 억지 주장과 선동 등은 민주적 질서의 토대를 허물고 공동체의 숭고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태로 언론은 이를 반체제적 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하게 비판해야 하고 결코 묵과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정치·경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땅히 추구해야 할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은 이미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신뢰를 침식하는 공범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며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한다.

‘대안미디어의 대안’으로서 기성언론의 역할

제임과 탄핵을 거쳐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와 극단적 선동은 주로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며 세력을 확대하였다. 5·18 폭동설과 북한개입설, 부정선거 음모론, 가짜 여론조사 결과 등의 허위정보는 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사실적인 외형으로 포장되어 유통되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환경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특정 후보자의 유세 현장을 방해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유발하도록 선동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왜곡된 정보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과 음모론이 짧은 시간 안에 대중적 담론의 형태로 자리 잡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흐름과 결합해 일방적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비판적 검증 없이 반향실 효과를 재생산하면서 사회적 분열을 증폭시키고 민주적 의사소통의 기반과 건전한 공론장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특히 최근 숏폼 콘텐츠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많은 쇼츠 영상이 생산·유통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맥락을 배제한 단편적 주장과 자극적 장면, 기획된 상황의 일부만을 과도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정책과 비전에 대한 유권자의 숙고된 판단을 유도하기보다 감각적 충격과 정서적 호소에 의존하는 피상적 선거캠페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했다.

이러한 부작용이 두드러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치러진 이번 대선은 기성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각인시켰다. 기성언론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 채널과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과 허위를 가

려내고,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으며,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공론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야 한다. 특히 감각적 소비와 단편적 자극에 치우친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성언론은 심층적 분석과 검증을 수행하고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피상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숙고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혼탁하고 불안정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론을 펼쳐야 할 기성언론의 역할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기성언론은 대안적 뉴스채널이 가지지 못한 고유의 레거시를 가지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기자와 데스크, 체계적인 편집시스템을 운영하며 사실 확인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어서 비제도권 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한 신뢰기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및 국가기관에 대한 출입취재가 가능하여 정보접근성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인적·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은 기성언론이 의제 설정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공신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기성언론은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려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뉴스 소비가 다변화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기성언론에게 위기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과 허위가 혼재된 탈진실의 시대에 기성언론이 정론을 추구하는 ‘대안 미디어의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

참고 문헌

- 문종대·안차수·진현승·안순태. (2007). 언론 수용자의 공정성 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38호, 183-210.
- 이완수·박재영. (2013). 방송뉴스의 언어와 표현: 뉴스언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뉴스언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4권 제1호, 5-46.
- 최승민·이호규. (2023). 매체별로 분리된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선거보도 심의기준 적용 사례와 중복심의 문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22권 제2호, 155-208.
- Druckman, J. N. (2004a). Political preference formation: Competition, deliberation, and the (ir) relevance of framing effec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4), 671-686.
- Druckman, J. N. (2004b). Priming the vote: Campaign effects in a US Senate election. *Political Psychology*, 25(4), 577-594.
- Iyengar, S., & Simon, A. F. (2000). New perspectives and evidence on political communication and campaign effec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1), 149-169.
- Lecheler, S., & De Vreese, C. H. (2018). *News framing effects*. Routledge.
- McIntyre, L. (2018). *Post-truth*. MIT Press.